

가뭄·물부족... 광주시, 영산강 물 끌어온다

기후변화로 인한 지속적인 현상
상수원 주암·동북댐 저수율 '뚝'
몇 달 뒤 심각한 식수난 겪을 수도
장성댐·담양댐 용수 활용하고
노후관 교체 등 상수도 개선 나서

광주시가 기후변화로 인한 지속적인 가뭄과 물 부족 사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시가 상수도 원수 추가 확보와 물 재이용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장 올 겨울 필요한 만큼 강수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개월 뒤 식수난을 겪을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일보 10월 6일자 2면>

하지만, 수자원 관리가 대부분 정부 중심으로 이뤄짐에 따라 지역별 가뭄 발생 빈도, 용수 이용량, 수자원 공급시설 등을 기반으로 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지역 맞춤형 가뭄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1일 "가뭄에 따른 극한 재난 상황에 대비해 노후 상수관 교체에서부터 빗물 이용시설 확대, 우수저류시설 설치·운영, 영산강 하천수 뿐만 아니라 장성·담양댐 용수까지 상수로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중이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제311회 임시회에서 최지현(민주·광산1) 의원이 광주시의 수자원 관리 대책 및 물순환과 관련한 질의에 "기후위기 상황에 대비해 광주시는 단기·중장기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광주·전남지역 1~9월 강수량은 633mm로, 평년 1388mm보다 755mm 가량이 적었다.

이에 따라 광주시민의 주요 식수원인 주암댐과 동북댐 저수율은 평년대비 50% 미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기준 동북댐 저수율은 3600만㎥로, 예년 대비 48% 수준으로 수돗물 공급 일수는 154일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예상된다. 주암댐 저수량 또한 1억8600만㎥으로 예년 대비 58% 수준으로 수돗물 공급 일수는 213일 정도에 그치고 있어 상수원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따라서 광주시는 단기적으로 동북댐 공급 가능 연장에 최대한 주력하면서, 우수 고갈 등 극단적 가뭄 상황에 대비한 지하수 개발과 영산강 하천수 공급 방안 등 비상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상수도 누수율을 막기 위해 연간 85억원 이상을 투자해 노후 상수도관 교체에 나서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상수도 원수 추가 확보를 위해 내년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10억원을 반영해 장성·



11일 오후 보성군 문덕면 주암댐 상류지역 내에 저수량 부족 지표 중 하나인 모래언덕 등이 생성돼 있다. 주암댐 저수율은 올해 마른 장마와 마른 태풍 등으로 전년대비 절반 수준인 1억 8600만㎥에 머물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담양댐 용수 활용 방안, 동북댐 인근 유역 용수 유입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극단적 가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주암·동북댐의 원수 수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영산강 하천수와 장성·담양댐 용수의 활용 방안 등도 검토중이다"면서 "최악의 가뭄은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이어지는 만큼 우선 3급수인 영산강 하천수를 용연정수장까지 끌어올려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거쳐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사업을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상수원 원수 수량을 늘리기 위해 동북·주암댐에 비해 수질이 크게 나쁘지 않은 장성·담양댐의 용수를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고 덧붙였다.

최근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 제4수원지의 원

수 확보를 위한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5일 광주의 예비 식수원 중 하나인 제4수원지(북구 청풍동 제4수원지 일대 9.7km²)가 41년 만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공식 해제되면서 지역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있었다.

이 본부장은 이에 대해 "제4수원지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해 상수원으로 계속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수질이 좋지 않은데 하루 2만t의 적은 원수 생산으로 인해 감사원의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한 것이다"면서 "하지만, 제4수원지의 일부 원수 확보를 위한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지현 광주시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지속되는 가뭄에 댐, 저수지, 광역·지방 상수도 등 개별 시설 위주 대응으로는 효율적인 가뭄 대처가 어려워 수자원 통합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댐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자원 확보와

관리에는 물 공급에 한계가 있는 만큼 상시적인 빗물 활용, 지하수 등 잠재적 수자원에 대한 관리대책 등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는 자연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빗물집무시설을 설치하는 물순환 선도 도시사업에 295억원, 식물 재배화분 및 투수블럭 등을 설치하는 그린 빗물 인프라 조성사업에 2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빗물저금통 사업에도 연간 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물 재이용을 위해 빗물이용시설은 54개소, 중수도시설 13개소를 운영중이다. 또한, 북구 신안교 일대와 광산구 우산지구에는 800억원을 투입해 우수저류시설을 설치 추진중이며, 저류수는 청소수·조경수 등으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하천 유지용수로도 이용할 계획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일제고사 부활하나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대상
2024년까지 초3~고2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일제고사로 불리는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사실상 되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 밀착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당국의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보고와 관련해 "지난해 고등학교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영어 수준이 미달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며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이명박 정부 시절 전수평가 방식으로 이뤄졌으나, 학교 서열화 조장, '줄 세우기' 비판 속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국 초·중·고 학생 중 극소수인 3%만 치르는 표집평가 방식으로 바뀌었다. 윤 대통령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 아래,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부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경우 올해 초·중·고2를 대상으로 시행하는데 내년에는 초·5·6, 초·3, 고·1·2로 확대하고 2024년부터는 초·3~고2로 대상을 더 넓힌다.

/연합뉴스

광주 대촌동 맹간제 탁상행정에 농민 피해 ▶6면

KIA 와일드카드 결정전 '실수를 막아라'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세계로 준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해상풍력

수도충전소

태양광

수도 선박

hydrogen fuel cell

친환경 에너지 산업으로
펼쳐가는
지속 가능한 미래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고
지구를 지키는 전남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